

2010년 국정감사, 4대강사업 부실 총집결

- 무리한 속도, 골칫덩어리 준설토, 근거없는 물확보, 전방위 정부 홍보전 등 밝혀져
-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해 4대강사업 해법 찾아야

10월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의 핵심이슈는 단연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꼬집는 국회의원을 향해 여당원이 낙태 강요 운운해 국감장이 시끄러워지기도 했고 군인들을 4대강 공사에 동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4대강사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말들도 많았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과 모든 정부부처가 동원되어 이뤄지고 있는 최대의 토건사업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다. 국감장에서 4대강사업을 논하지 말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2010년 국정감사는 부실한 4대강사업의 총집결장이었다. 무리한 속도전, 일괄적인 대규모 준설토,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물 확보 계획과 홍수예방, 모든 정부부처를 동원한 홍보활동 등이 논란이 되었다. 과거 정부가 적극 지원한 팔당 유기농단지도 4대강사업으로 인해 유기농업을 포기하고 자전거길이 놓일 처지가 되었다. 심지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직접 유치한 경기도는 팔당 유기농단지를 '쓰레기통'에 비유했다. 일관적이어야 할 정부의 정책이 4대강사업으로 전면 재수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현재 일본 나고야에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나고야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생물다양성 파괴 혐의로 NGO가 수여하는 '회색상'을 수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나고야 총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곳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는 두루미 집단도래지인 구미 해평습지다. 해평습지는 러시아와 일본 이즈미 월동지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와 먹이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올해는 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해평습지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4대강사업 문제점들은, 결국 이 사업과 현 정부와 국민들이 비극적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 그리고 경고는 구체적으로 4대강 공사현장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1세기 한국사회 최대의 국론 분열 사업이다. 국민들이 동요하고 민심이 불안하다. 4대강사업,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으로 파국에 치닫지 말고 조속히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 첨부 :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사업 문제점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사업 문제점

- 4대강사업, 목적이 뭐였지? - 홍수예방효과도 없고 물 부족하지도 않다.
- 경제적 타당성 없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자꾸만 늘어날 전망
- 농민을 우롱하는 4대강 사업
- 골칫덩어리가 된 준설토
- 대운하가 아니라면?
- 범무시하는 4대강 사업
- 위락단지로 만드는 게 강 살리기?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훼손되는 환경

□ 4대강 사업, 목적이 뭐였지? - 홍수예방효과도 없고 물 부족하지도 않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목적은 홍수를 예방하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의 보고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연구], 2009.12)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홍수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0년 홍수 빈도에 대비한다던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100년 빈도로 보 등이 설계된 사실이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에서 드러났다. 13억^m의 용수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사업을 앗고도 25년 기준으로 생활, 공업용수는 연간 9억5천만^m가 남았다. 특히 물이 가장 많이 남는 곳은 4대강사업 규모가 가장 큰 낙동강이고 물이 부족한 곳은 오히려 금강과 영산강이었다. 하천유지용수 역시 최근 몇 년간 고시한 하천유지용량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어 4대강사업 목적이 타당성을 갖는지 의심스럽게 했다.

<국감 보도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대강사업 예측치 못한 홍수량 감당하기 무리'([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연구], 2009.12) 라고 밝힘 - 10/4 홍희덕 의원
- 4대강사업 목적인 '하천유지용수', 최초 고시한 하천유지용량 대부분 만족하고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 유지용량 불만족. 확보할 물 13억^m의 용도가 불분명함 - 10/4 이미경 의원
- 2025년 수도정비계획 보고서(수자원공사, 2009.12)에 따르면 4대강사업 앗고도 25년 기준으로 생활, 공업용수는 연간 9억5천만^m 남게 됨. 이는 4대강사업으로 확보하겠다는 13억^m의 73%에 해당. 물이 가장 많이 남는 곳은 낙동강권으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17억 5,200만^m 남게 됨. 반면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은 오히려 물 부족. 4대강 주변에 취수장 설치계획이 없음. 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여유 수량을 생활,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용수수급 불균형은 수도정비계획 통해 해결 중. - 10/7 강기정 의원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하천재해예방 사업 투자우선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 중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중은 1.2%이고, 나머지 98.8%를 지방하천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반면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전체 10조 4,793억중 5,743억원으로 약 5.5%에 불과함 - 10/11 최규성 의원

□ 경제적 타당성 없는 4대강사업, 예산은 자꾸만 늘어날 전망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알려진 4대강사업 예산은 총 22조 2천억원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서 다른 용도로 쓰여야 할 돈들이 4대강사업 예산으로 전용되거나 토지보상금 등이 늘어나면서 4대강사업의 실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4대강사업 중 단 3%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실제 예산이 20%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비용편익분석결과 경제정타당성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실제로 수질을 정화하고 강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4대강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을 농지 리모델링 비용이나 보 설치로 인한 물 정화 비용 등을 보면 정말 나라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8조원의 공사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세금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4대강사업의 예산은 30조가 훌쩍 넘을 것이다.

<국감 보도자료>

- 4대강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수계기금(물이용 부담금)으로 4대강사업 영향평가 조사연구 사업비 집행(보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 10/4 홍희덕 의원
- 수질개선, 홍수예방 예산을 4대강 홍보에 79억원 전용, 국가재정법 위반 :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13억), 국가하천정비(국토부 32억), 정책기획연구운영(국토부 20억), 국가하천정비연구개발비(국토부 2억), 저수지둑높이기(농림부, 12억) - 10/4 이미경 의원
- 한강수계기금(2009년 수도권 시민 톤당 160원, 3,1910억 2,700만원) 중 271억 8,100만원으로 4대강사업의 본사업인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에 투입. 숨어있는 4대강 사업비, 물이용 부담금 전용 - 10/4 홍희덕 의원
- 경실련, 강기갑 의원실 <4대강사업 비용 검증결과> 1차분석 발표 - 13.1조 시설공사비 중 도급전체는 8조로 5조 이상 시설공사비 부풀려짐. 강모래는 1㎡당 10,000원 이상 판매하는 황금모래로 준설업자가 지자체에 비용을 지불함. 그러나 4대강사업에선 1㎡당 9000원 단가로 비용을 들여 파내고 있음. 준설토 해결 위해 농경지 위에 준설토 쌓는 리모델링사업에 1조 2천억원 총당. 보로 인한 물정화 위해 환경부예산 3.9조원, 4대강사업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 - 10/14 강기갑 의원
- 4대강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단 3%, 6,000억원 사업 KDI 보고서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점 상당수 지적되고 예산이 20% 증가하는 결과 나옴 - 10/11 백재현 의원
- 4대강사업 보상비 마스터플랜에서는 1조 5,482억원 소요. 2010년 8월말 보상지역 39.2% 완

료되었고 보상금의 89%인 1조 3,804억원 이미 사용. 이 금액은 실제 집행액이며 제출금액은 1조9,169억원(과다 보상했거나, 애초 보상비 낮춰 잡았을 의혹) 보상금 이미 90% 집행된 상황이라 보상금 국토부 수정금액보다 증가 예상. 감정평가 현황 제출하지 않음 - 10/11 백재현 의원

- 4대강 예산 때문에 지자체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연 피해 속출 : 환경부, 4대강 총인처리 공단폐수 예산반영은 81% 편성, 비4대강 공단폐수 예산 반영은 4% - 10/4 홍희덕 의원
- 4대강사업인 저수지독높이기사업으로 인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600억원, 배수개선사업 330억,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570억 삭감. 특히 농로포장 및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은 639억 전액이 삭감되는 등 4대강사업을 제외한 30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중 28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5.9%, 4,924억원이 삭감됨 - 10/12 김영록 의원
- 4대강사업비 8조원! 수자원공사 재정악화로 인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4대강 주변개발- 80조 규모 공사해야 가능, 정부에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 요구, 수도요금 인상과 신규조세 신설, 자산매각이나 댐 등 시설운영권 매각, 지분매각 등 민영화 시도) 검토해도 8조원 회수, 금융비용 4,000억원 불가능함. 4대강사업비로 회복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는 다국적물 전문기업의 좋은 먹잇감 될 것 - 10/7 김진애 의원
- 수자원공사 부실 높 : 올해 말 부채 비율 전년대비 176% 상승, '운하 건설'을 위해 수공 '묻지마 돈 빌리기' 채권발행. 매년 증가하는 수공 이자 부담액(올해부터 1,000억원을 넘었고 10년간 계속 늘어날 것), 올해 당기순이익 5년 전에 비해 70% 감소. 수공 재무현황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악화. 내년부터 갚아야 할 원금 상환액 급증. 4대강, 운하 사업 빛 이자만 1조 648억원 - 10/7 김진애 의원

□ 농민을 우롱하는 4대강 사업

이번 국감에선 배추값 폭등이 4대강사업과 상관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말이 많았다. 정부에선 4대강사업으로 사라진 경작지 규모가 많지 않다 주장했지만 의원들은 더 많은 규모의 농경지 피해를 주장했다. 4대강사업이 되면서 농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사유지였던 곳이 하루아침에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농경지 리모델링이다, 적치장 이용이다 등의 명목으로 멀쩡한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도 생겼다. 특히 유기농업단지인 팔당 일대의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유기농업이 오히려 땅과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국정감사에선 경기도가 인용한 대부분의 자료가 사실무근에 허위자료임이 밝혀졌다.

<국감 보도자료>

-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가 10,550ha가 영구상실 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총 18,741ha의 유기농, 시설하우스 등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 - 10/4 김영록 의원

-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채소값 급등,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다' 라는 보도자료는 "산출근 거도 없이 숫자를 조작한, 완전히 날조된 거짓 데이터"라고 지적. 4대강지역 시설채소재배면 적은 2,500만평(16.5%)이 줄으며 정부 발표 1,100만평(1.4%)과 비교하면 평수로는 1,400만평, 비율로는 무려 15%가 더 줄어들었다 - 10/4 유원일 의원
- 국토부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인용하여 팔당유기농단지 수질오염 악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이는 보고서 왜곡한 결과. - 팔당하천구역 경작지의 km^2 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 인(T-P) 함량이 일반 농경지보다 각각 4배와 7배 높다는 것임, 국토부가 '일반 농경지'라고 한 부분이 실제로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로 밝혀짐, 논밭은 전체 15%, 수목이 58%를 차지하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농약과 비료를 뿌리는 논밭이 대부분인 '일반 농경지'로 바꿔치기 한 것임 - 10/13 김진애 의원
- 경기도가 속인 팔당 유기농의 5가지 진실 : 유기농 발암물질 생성 보고서는 유기농 관련 보고서가 아님. [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 존재하지 않음. IFAOM 4대강 동의하지 않았음. 유기농대체부지는 10년 임대조건의 58%가 산지, 임야가 농지가 되면 땅주인에게만 좋은 일, 유기농업 팔당호 수질 영향은 0.1%에 불과 - 10/13 강기갑 의원
- 낙동강 7공구 매리마을 산딸기 재배지로 연 30억 수익. 4대강 사업지에 포함되어 주민들이 반대하자 사유지 29만5천 m^2 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유권권리행사 막음. 공권력남용과 사유재산 침해. - 10/8 강기갑 의원
- 국립생물자원과 2009년 연구보고서(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 및 관리 자원화 방안연구)에서 농경지대가 조류의 종 다양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밝힘. 하천 정리 등으로 수달 서식지 감소 지적. 농경지 오염원 주장 중단요구 - 10/18 홍희덕 의원실

□ 골칫덩어리가 된 준설토

4대가 사업의 핵심사업인 준설토, 원래 강 준설토는 고가의 건축자재였지만 4대강 사업으로 단기간에 대규모로 채취된 준설토는 적치장을 찾지 못해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준설토 정에서 낙동강 일대에는 과거 불법 매립되었던 폐기물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침출수가 흐르며 방치되거나 오염된 준설토가 농지리모델링 등에 쓰일 예정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감 보도자료>

- 여주군, 4대강사업으로 골재 3천5백만 m^3 발생 예정이며 이는 여주군 연간 골재 소요량 110만 m^3 의 32년치임. 2010년 9월 1천5백만 m^3 발생했으나 매각은 단 1건. 운반거리(30km 이내)에 따른 경제성 고려하면 판매 불가능. 적치장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으로 여주군 골칫거리 될 수 있음. 한강 4공구 72만 m^3 적치장 확보 못해 준설토 현장 방치 우려 - 10/4 김진애 의원

- 낙동강 24공구 사토장 및 적치장 부족으로 준설량 3천5백만m³에서 1천7백만m³으로 절반이나 축소 필요. 국토해양부가 2009년 8월에 준설량 축소와 이에 따른 1,000억 규모의 설계변경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입찰 재공고(안) 마련. 시공사에 설계변경 요청하고 국토부가 승인하는 형식의 편법공사 발주.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도 공개 늦춰 - 10/6 김진애 의원
-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확보율 56%에 불과하고 적치장 확보비 260억원에 골재 매각실적은 0원. 적치장 미확보 장기 시 골재 공사현장이나 강변 방치 우려 - 10/8 김진애 의원
- 낙동강 17공구 창원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000톤 이상의 불법매립 폐기물 발견 / 17공구: 골재적치장(창녕 길곡)에 600여톤 폐기물 매립 확인, 17공구: 창원 신천 하류 둔치 준설토 공사진입도로에 1천여톤 이상 매립 확인, 18공구: 함안보 하류 모래침사지 제방 입구에 매립 확인, 19공구: 월하지구 강변 쪽으로 도로에 매립 확인, 19공구: 창아지 마을 앞, 준설토 트럭 계근대 앞에서 약 2Km 지점까지 약 3,000톤 확인 - 10/11 홍영표 의원
- <부산국토청> 녹장대책, 폐기물 불법사실 알고도 한 달 간 방치. 낙동강 3공구 준설탁수기준치 초과해 작업 중단된 뒤 두 달 뒤 탁수 및 점토처리 대책용역 착수. 매립물과 폐기물이 발견된 상동면과 한림면 인근지역 2009년 토양조사에서는 기준치 이하, 전면재조사 필요. 불법매립토 발견된 8~10공구와 15공구의 준설계획량은 총2,720만m³ 이 중 농경지 리모델링에 927만m³ 이용계획. 밀양, 양산, 김해 등 오염된 준설토로 농경지오염 예상 - 10/8 강기정 의원
- 낙동강 8, 9구간 김해시 상동면 불법 폐기물 22만톤 매립. 식수원인 매리취수장(부산시민 202만명 하루 110만톤) 상류 2km 위치. 준설 계속하거나 수변구역 개발 시 침출수 강으로 유입되어 오염문제 유발. 환경영향평가서 지반조사에선 이 부분 누락함. 15공구에도 약30만평 매립. 이미 준설을 한 곳인데 침출수 흘러나온다는 주민 증언 - 10/08 김재윤 의원
- 낙동강 3공구 대전지구, 점질토로 인한 탁수발생하고 준설구간에 성토하지 못하는 점토(70% 이상) 발견. 성토 불가능해 응집제 투여 등 재처리해야함. 공기에 맞추기 위해 지질조사나 준설토 적치장 확보없이 속도전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준설량 변경, 홍수수위 153% 상향조정 예정. 그러나 준설량 변경하면서도 유역종합치수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없음. 하천법 위반 소지. 준설량 40% 축소했음에도 삼락둔지 500m 폭으로 절개 - 10/08 김재윤 의원
-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인근 저지대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310ha(영산강 용두지구 100ha, 낙동강 본리지구 101ha, 낙동강 묘리지구 46.2ha 등 7개 지구 310ha)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형질변경 - 10/3 김영록 의원

□ 대운하가 아니라면?

최근 정부가 4대강사업 이후 보에 갑문을 설치해 수계별로 공사구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낸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는 보에 갑문을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국감에선 갑문에

보를 설치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일련의 계획은 4대강사업이 사실상 운하사업임을 뒷받침한다. 4대강에 일정한 폭과 수심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결국 운하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국감 보도자료>

- 4대강 보에 갑문설치 못한다는 정부, 여당은 대운하 계획 때 팔당댐도 보강공사로 갑문설치 가능하다고 주장. 최상류인 영강~안동댐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저수로폭 최소 340m 확보. 운하 위한 수로폭(200~300m) 확보하지 않았던 주장은 거짓 - 10/11 김진애 의원
-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살리기사업 총 구간 118km 중 제방보강은 16km, 자전거도로는 235km, 2공구 죽산보는 뱃길관리수위 위한 사업임 - 10/19 홍영표 의원
- 함안보 주변지역 습지화 침수예상 알고도 공사 강행함. 마스터플랜 계획에서 함안부 주변 침수피해 제기되자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추고 보 높이도 13.2m에서 10.7m로 설계변경. 건설사 실시설계에서도 이미 나타난 문제이며 3m로 낮춰야 습지화 문제 해결. 낙동강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겠다는 대원칙 때문일 거라는 의심 - 10/7 유선호 의원
- 서해뱃길사업은 한강운하기본계획에서 '화물운송'만 '여객'으로 바뀌 실시. 준설규모는 4m에서 6m수심으로 더 커짐 - 10.18 강기갑 의원

□ 범무시하는 4대강 사업

예산전용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편법공사 발주 등은 4대강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사례들이다. 특히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은 너무나 일반적인데, 최근 4대강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구간에 공사가 강행된 사례가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토지보상을 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 역시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국감 보도자료>

- 4대강사업 공사 조기 착공 위해 금강 유등 2지구 구간 중 1.8km구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무시(공사 구간 6.3km 중 09년 공사시행구간인 4.5km만 협의 완료). 공사 조기착공위해 협의누락 4월에 인지하고도 5개월간 방치. 9월 30일에 금강환경청에 협의 요청. 동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 강행.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추가조사 중 - 10/14 김진애 의원
- 지방국토관리청의 지자체 4대강 토지보상용 별도 계좌지시는 지방재정법 위반. 애초 국비를 통해 지자체 회계프로그램에서 집행되던 보상비가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변경되면서 국비로 집행을 보상비가 모두 국고환수조치되고 보상업무 중단. 이후 통장개설 후 보상 재개. 별도계좌 개설은 위법. 책임을 지자체 토지보상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기 - 10/11

□ 강주변을 위락단지로 만드는 게 강 살리기?

4대강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사업들은 대부분 하천 주변을 관광하거나 위락단지로 만드는 사업임이 밝혀졌다. 더구나 8조원의 공사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하천변 개발로 보장해주려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변의 개발을 위해 아무런 환경규제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정부의 4대강 주변개발 TF에 부동산업자와 건설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국감 보도자료>

- 4대강사업 연계계획인 '경기도 강변살자'(2009년 3월 22조8천억 사업 발표)는 식수원인 한강을 위락단지로 만드는 운하 준비 및 팔당상수원 오염 사업. 난개발로 팔당 상수원 등 한강 상류지역 수질 악화 우려. 경기개발연구원 4대강사업 보 설치 이후 한강의 수질 및 하천환경 악영향 가능성 경고([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 - 10/13 김진애 의원
- 4대강사업 한강에서는 부동산개발업자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홍수예방 관련 없는 자전거도로가 100km, 제방사업은 54km 불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과도한 친수공간 설치, 개군지구 제방, 자전거도로 및 자연초지 구분 없이 토지이용계획서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 10/14 홍영표 의원
- 수공 친수법 통과 대비 4대강 주변지역 개발위한 용역 발주. 개발방향으로는 LH 공사처럼 택지개발하는 수변도시 조성하고자 함 - 10/7 김재윤 의원
- 친수구역특별법 수공 특혜만 문제가 아님. 투기조장법, 건설족 특혜 지원법. 8월 25일 4대강 주변개발 TF 회의에선 공무원에외도 부동산학과 교수, 건설사, 민간펀딩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 구상함. 부동산투기업자와 대형건설사에게 개발정보를 넘겨준 셈 - 10/11 최규성 의원
- 4대강 빛 갹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2억2천만원 용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활성화방안연구' : 한강 등 내수면 유람선에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 '4대강 선형 관광자원 개발계획' - 10/11 백재현 의원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훼손되는 환경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었다. 4~5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그 부실함이 어떨할지는 쉽게 예상되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은 양파처럼 까면 갈수록 끊이지 않고 계속 드러났다.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에 그치면 다행이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생태계 훼손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국감 보도자료>

- 4대강사업 환경영향성평가 검토에서 한강 기상자료를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시켜 결과 왜곡함. 보현댐과 송리원다목적댐 등에서도 기상관련 내용 부실 - 10/7 홍영표 의원
- 낙동강살리기사업 2권역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구간 습지지역 및 훼손면적 산정 결과, 전체 54.1%가 보완 필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28.1%로 급감. 국토부는 습지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 이는 습지개념도 잘못 알고 있는 결과 - 10/7 홍영표 의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21km 낙동강, 한 달 만에 1451쪽 환경보고서 제출
- 낙동강변 철새도래지 및 습지파괴 심각, 7월 26일 람사르네트워크 일본에서 4대강 중단 촉구 긴급 성명발표 인용. 낙동강 38개 습지 중 21개 55.2%가 영향 받음. 철새도래지인 해평 습지는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철새집단도래지 - 10/8 김재윤 의원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가 4대강 홍보 앞장서 - 한강유역환경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4대강 홍보 강의 활동, 언론기고 등 - 10/7 홍영표 의원